

[보도자료]**“외국의 여성건강 증진기반 고찰 및 한국의 정책과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김 인 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haza4122@kwdimail.re.kr)

보고서 관련 문의 : 김 영 택 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77, 이메일: ytk@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2007년 『외국의 여성건강 증진기반 고찰 및 한국의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여성건강증진 기반(여성건강 관련 법, 조직, 인력, 통계)과 캐나다와 미국의 여성건강증진기반을 비교 고찰하였다.

◇ 여성건강 정책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건강의 젠더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 보건정책은 성중립적으로 시행되었거나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정책대상의 파악이 미흡하고,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져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소홀히 해왔다.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여성정책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임신, 출산영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성(sex/gender)이 보건정책의 주요한 측면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이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소득, 교육, 직업, 가족, 노동 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보건정책이 수립, 시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각 부처 내에서 여성건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분산화와 함께 총괄적으로 젠더별 건강실태와 전략이 수립될 수 없는 여건임

최근에는 치료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건강담당 부처 간 산발성과 성(sex/gender)과 건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건강관련 학회 및 시민단체는 여성건강에 관련하여 많은 활동을 하지만 대부분 여성의 신체 특히, 생식부분의 출산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즉, 남녀를 비교했을 때의 건강차이, 여성집단 내에서 건강차이, 생애주기별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의 건강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적인 성별 건강통계 부재로 인하여 성과 여타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합한 불건강 원인 및 상태를 알기 힘들

종합적인 성별 건강통계의 부재로 인하여 여성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부재로 이어지고 이는 보건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다시 연구 및 정책이 수립되지 않는 악순환을 낳는 매우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매년 “Women's Health U.S.A”를 발간하여 여성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여성건강 혹은 젠더와 건강과 관련된 교과과정 및 보건분야의 성별 영향평가가 미흡함

최근 대학이상 기관에서 2년 동안의 교과내용 중 ‘여성건강’ 혹은 ‘젠더와 건강’에 관한 강의가 있는지 조사한 본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44개 대학 중 1곳과 보건대학원 5곳 중 1곳에서만 기초적 수준의 젠더와 건강’이라는 과목이 한국에서 교육되고 있다. 반면에 외국에서는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사회과학대학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 등 보건인력과 미래의 사회정책수립자를 대상으로 ‘젠더와 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내용도 사회적 요인, 의료적 차원을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이다.

또한 교육과정에 보건 분야에 적합한 성별영향평가를 개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수행된 국가의 보건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그 수에 있어 매우 저조하여 이제까지 시행된 성별영향평가 과제 104개 과제 중 건강 분야는 6개 과제로 전체의 6%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외국의 경우는 한국의 여성건강증진 기반과 극명한 대비를 이룸

캐나다의 경우 보건복지부내에 여성건강국이 존재하여 모든 보건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관철시키고 여성지위처의 주관 하에 보건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기금마련을 통해 지역별 여성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캐나다여성건강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의 NGO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여성건강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보건부의 여성건강국은 질병예방,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연구 보건 의료 인력 양성, 의료 및 과학분야의 여성인력개발 등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여성 건강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여성건강 증진 기반의 중심이 되며 구체적으로 보건부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 활동을 조정하고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의 여성 건강 관련 문제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내 다른 정부기관, 연구소, 전문가, 소비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으며 건강 교육 및 홍보, 보건의료혁신, 의학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성별 간 혹은 성별 내 건강 형평성을 추구하며 효율적인 여성건강정책

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과 남성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분산된 각 부처의 건강정책 조정, 실행, 평가를 시행하고 젠더와 건강문제를 연구하는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생애주기별 성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반영된 종합적, 예방적 건강투자강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보건 분야의 성별영향평가 시행과 더불어 보건 및 보건관련 인력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